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네팔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2019년2월12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47천 km <sup>2</sup> 	<b>인구</b> 29.7백만 명 (2018년 기준) 	<b>정치체제</b> 공화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288억 달러 (2018년 추정) 	<b>1인당GDP</b> 971 달러 (2018년 추정) 	<b>통화단위</b> Nepalese Rupee(NR) 	<b>환율(U\$기준)</b> 108.5 (2018년 평균) 

- 히말라야 산맥 서남부에 위치한 네팔은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08년 5월 공화정 수립을 공식 선포한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2017년 11월 연방 의회 선거가 개최되었음.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이며,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농업이 GDP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81%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 최근 관광 부문의 성장과 투자 확대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국토의 80%가 산지로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히말라야 산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향후 관광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5. 15 수교 (북한과는 1974. 5. 15 수교)

**주요협정** 영사협정('69), 무역협정('71), 차관공여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3), 항공협정('05), 문화협정('05), 무상원조협정('15)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25,508	34,484	35,037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수 입	1,786	1,907	2,038	섬유제품, 의류, 패션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2건, 70,596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제성장률	6.0	3.3	0.6	7.9	6.3
소비자물가상승률	9.0	7.2	9.9	4.5	4.2
재정수지/GDP	1.5	0.7	1.4	-3.3	-5.5

자료: IMF, EIU

### 관광업 및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

- 네팔 경제는 2018년 GDP 기준 서비스업 52.0%, 농업 26.2%, 산업(제조업) 13.8%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8년은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농업 부문)**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네팔 농축산부에 따르면 네팔은 전체 국토의 20%가 평야 지대이고 전체 노동 인구의 81%가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 국가이며,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밀 등 곡물임.
-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농산물 순수입이 지속되고 있음. 네팔 관개부(Ministry of Irrigation)에 의하면 전체 농경지 중 관개용지 비중은 약 33.8%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매년 우기(6~9월) 강수량 변동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의 변동성이 큼.
- **(관광 부문)** 네팔 관광객 유치 규모\*는 2015년 4월 대지진\*\* 발생으로 급감하였으나 2016년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후 연평균 24%대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중임.
- 관광 부문은 인도와 중국 등 인접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와 네팔 정부 차원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힘입어 향후 네팔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네팔 방문객 수(만 명) : 79.0('14) → 53.9('15) → 75.3('16) → 94.0('17) → 117.3('18<sup>e</sup>)<sup>1)</sup>
- \*\* 2015년 4월 25일 대지진 : 수도 카트만두 서쪽 80km 지점에서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음. 9,000여 명이 사망하고 22,0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네팔 정부는 전체 건물의 36.2%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피해 복구비용이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sup>2)</sup>
- 2018년 네팔 경제는 지출 측면에서 주로 GDP 대비 49.7% 수준을 기록한 총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 온 것으로 분석됨.
- **(투자)** 최근 5년 평균 고정투자 규모가 GDP 대비 26.9%에 이를 정도로 고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2015년 4월 대지진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고정투자 소요 확대와 최근 재고투자 회복으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나 2018년 GDP 대비 49.7%를 기록하였음.
- EIU는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져 2020년 총투자 규모가 GDP 대비 58.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

1) 자료 : 네팔 이민국, 네팔 관광청

2) 자료 : 네팔 통계청

## 국내경제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최근 5년 간 GDP 대비 평균 77.9%를 기록해 왔으나, 2018년 해외 노동자 송금액의 증가 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70.7%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의 해외근로자 송금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25.1%를 기록하며 직전 회계연도(26.3%) 대비 하락하였음. 이는 주요 인력수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카타르, UAE 등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앞 비자 발급 제한 및 관련 지출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IMF에 따르면 네팔 경제는 최근 관광업의 성장과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 및 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비효율적인 정부지출 관리, 불확실한 투자환경 개선 전망 등으로 2023년까지 4%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향후 수년 간 5%대 물가 상승 전망

- 내륙국인 네팔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인도가 2016년 6월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최근 양국 간 안정적인 교역이 지속되면서 2017년 이후 네팔의 물가상승률도 4%대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는 2017회계연도 기준 네팔 전체 상품수입의 65.4%를 공급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인도로부터 수입이 봉쇄되거나 인도 물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네팔 물가도 급등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왔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의 물가 상승은 주로 식료품 이외의 품목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2% 수준을 기록하였음.
-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의 소비자 물가는 정부지출 확대,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라 2023년까지 연평균 5% 중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네팔 중앙은행은 2018년 7월 물가상승률을 중앙은행 관리 목표치인 6.5% 이내로 지속 관리하며, 네팔 루피화 가치를 인도 루피화에 1.6(네팔 루피):1(인도 루피)의 비율로 고정시킨 현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 및 경제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2018년 -5.5%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3년까지 -4%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보다 효율적인 정부예산 관리 및 지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회계 시스템이 개선되고 중앙-지방정부 간 일원화된 정부예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정부의 IT 시스템은 수입과 지출이 누락되어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시스템에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8회계연도 정부의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이 82.4% 수준이었고, 전체 지출의 37.5%가 4분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부지출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상수지	496	2,446	-168	-815	-2,168
경상수지/GDP	2.5	11.4	-0.8	-3.3	-7.5
상품수지	-6,558	-5,698	-8,002	-9,161	-11,690
상품수출	1,022	813	762	840	894
상품수입	7,581	6,511	8,764	10,000	12,584
외환보유액	5,980	7,906	8,476	9,181	9,833
총외채	4,049	4,152	4,195	4,601	5,027
총외채잔액/GDP	20.3	19.4	19.8	18.5	17.5
D.S.R.	7.3	7.5	7.3	7.4	6.8

자료: IMF, EIU

### 자본재 중심의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확대 전망

- 네팔은 최근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2017년 16.4%, 2018년 10.8%의 총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반면, 상품수지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15년 대지진, 인도와의 무역 갈등 및 인도의 관세 부과 등 주로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며 최근 적자 폭이 확대됨.
- 2016년 상품수출은 2015년 대지진으로 생산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2015년 9월 네팔 내부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네팔-인도 접경지역의 국경 봉쇄 사태로 양국 간 상품무역이 중단되면서 상품 수출 규모가 대지진 발생 이전인 2014년 대비 74.6%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국경 봉쇄는 2016년 2월 해제되었으나, 수출실적 회복에 시일이 걸린 가운데 2017년 7월 인도에서 단일화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가 시행되며 네팔 산(産) 야채 및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한 12%의 관세 부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대 인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EIU는 2020년에야 상품수출이 대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반면, 네팔의 상품수입은 2015년 이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여 2018년에는 상품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약 25.8% 증가하였음.
- 네팔은 그동안 막대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도 지속적인 해외원조 자금 유입과 최근 관광객 유입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향후 상품수입 증가세가 서비스 수지 및 해외원조 유입 규모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EIU는 202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8.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규모는 안정적이거나, 외채 상환능력 개선 필요

- 네팔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3년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며 2018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98.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8.1개월, 단기외채 잔액의 17.9배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안정적인 상황임.
- 네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송금은 인력수요 국가의 정치적인 변수나 갈등에 취약하여 안정성이 낮은 편임. 아울러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2017회계연도 기준 FDI는 중국계 시멘트 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8백만 달러 증가한 19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GDP 대비 0.8%에 불과한 규모임. 이는 네팔과 동일한 OECD 6등급 국가인 캄보디아가 12.6%, 7등급인 라오스가 4.9%임을 감안 시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대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2018년 말 기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7.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최근 총수출 증가 추세와 더불어 원리금상환액이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2.1%를 기록하며 2% 초반대 수준을 유지 중임.

\* 외채원리금 상환액(억 달러) : 2.0('15) → 1.9('16) → 2.2('17) → 2.3('18°)

\*\* D.S.R.(%) : 2.1('15) → 2.0('16) → 2.1('17) → 2.1('18°)

## 구조적취약성

###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네팔은 내륙국으로 연료와 공산품 및 전력 등을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발달 수준이 저조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 없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제구조가 외부적 충격에 취약함.
- 2017회계연도 기준 교역규모가 네팔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각각 65.4%, 5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인도는 네팔과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이어 왔으나, 인도의 경제정책 변경 또는 양국 간 일시적 긴장 상황이 네팔에 미치는 타격이 컸음.
- 인도에서 물가안정 목표제가 시행된 2016년 6월 이전의 네팔 물가가 불안정한 추이를 보여 왔고, 2015년 9월 ~ 2016년 2월 기간 중 네팔-인도 국경이 봉쇄되어 교역이 끊기면서 네팔에서 극심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겠으나, 외부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역상대국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3년 간 네팔의 주요 수입거래 국가 및 비중(%) >

FY2015		FY2016		FY2017	
인도	62.4	인도	65.2	인도	65.4
중국	15.0	중국	13.2	중국	12.9
UAE	2.2	UAE	3.0	프랑스	1.7

자료 : 네팔 관세청(Nepal Department of Customs)

###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과제

-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은 전력, 교통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이 부족하여 140개 대상국 중 109위를 기록하였고, 인프라 부문 순위는 119위로 열악한 수준임.
- 특히 전력의 경우 잠재 수력발전 용량이 약 42,000MW에 달해 브라질 다음으로 수력에너지 보유량이 풍부하지만 발전설비가 부족해 정전이 발생하고, 전력 수요량의 30%를 인도에서 수입하는 실정임.
- 네팔 정부의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서는 총 1,073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 중 511MW는 민간 부문이, 562MW는 네팔 전력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 네팔 정부는 소득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예상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안에 전력 생산 용량을 15,000MW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수력 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네팔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부정부패 및 네팔 현지의 열악한 건설 여건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분류됨.
- 또한 전체 강수량의 80%가 6~9월에 집중되는 네팔의 몬순(monsoon) 기후를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수력자원 개발과 함께 전력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성장잠재력

### 히말라야 산맥 등 천혜의 관광자원 보유

- 네팔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해발 8,848m)을 비롯한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8,000m급 봉우리 8개,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세계적인 힌두교 사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임.
- 네팔 정부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Visit Nepal 2020 Campaign'을 현재 추진 중이며, 관광업은 향후 네팔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Visit Nepal 2020 Campaign'은 2020년까지 연간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2,000억 네팔 루피(약 1.97조원) 규모의 관광 수입 획득을 목표로 하는 네팔 정부 차원의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임.
-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2018년 네팔 연간 방문객 수는 117.3만 명, 2017회계연도 기준 관광 부문 수입은 671억 네팔 루피(약 6,616억 원)로 추산됨.

## 정책성과

###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계획 추진

- 2017년 11월 네팔 역사상 첫 연방 및 지방 의회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 동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부와 내각이 구성되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네팔 정부는 2018년 5월 'Prosperous Nepal, Happy Nepalese'를 새로운 경제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농업의 현대화·상업화를 통한 농업생산량 2배 확대, 도로 및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계획은 현재 해외송금에 의존하는 소비 위주의 경제에서 높은 생산성에 기반한 투자 주도 경제로의 전반적인 경제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IMF나 EIU에서 예상한 성장률과는 큰 차이가 있음.

< 네팔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3년 평균
IMF	5.0	4.2	4.2	4.2	4.3	4.4
EIU	6.6	6.3	6.5	6.3	6.2	6.4

- IMF에 따르면 네팔의 최근 2년(2017 ~ 18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7.1%이며, 2017년의 높은 성장률(7.9%)은 대지진 발생 이후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또한, 농업 생산량은 여전히 기후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관광업 이외의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 10%가 면밀한 정책적·경제적 분석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치동향

### 10년 간의 내전이 종식되면서 2008년 5월 공화정 선포

- 1990년대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카스트 제도의 차별에 반발하는 하층 카스트들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마오주의 중앙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Center: CPN-MC, 이하 마오공산당)을 창립하고 1996년 왕정 폐지 및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인민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음.
- 10년 간 지속되며 1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내전은 2006년 11월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종식되었고, 2008년 5월 개최된 제헌 의회에서 왕정 폐지 및 공화정 도입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

### 공화정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2017년 연방 의회 선거 실시

- 제헌 의회 당시 26개 정당이 난립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한 결과 2008년 1차 및 2013년 2차 제헌 의회가 파행에 이르게 됨. 그러나 2015년 4월 대지진 발생으로 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 논의가 가속화되어 첫 제헌 의회 개최 후 7년 만인 2015년 9월 헌법이 공포되었음.
- 한편, 남서부 평원 지역에 거주하는 마데시 족(인도계 소수민족)이 헌법 일부 조항에 불만을 품고 네팔-인도 접경지역을 점거하면서 2015년 9월부터 5개월 간 네팔-인도 국경이 봉쇄되었음. 이로 인해 극심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야기된 끝에 헌법이 수정되면서 국경 봉쇄도 해제되었음.
- 수정된 헌법에 따라 2017년 11월 개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마오공산당과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nified Marxist Leninist: CPN-UML)의 공산당 연합이 친(親)인도 성향의 중도 좌파인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에 압승하며 2019년 2월 현재 친중 성향의 공산당 연합이 집권 중임.
- 연방 의회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1996년 내전 발생 이후 이어져 온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단락되고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사회동향

###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차별 지속

- 10년마다 실시되는 네팔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1년 네팔에는 123개의 언어와 125개의 카스트/민족 구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네팔 정부는 1963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의 폐지를 선포하였으나, 인구의 81.3%가 힌두교도인 네팔에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네팔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국제관계

###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실리 외교 추진

- 네팔은 남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 두 국가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2017년 집권한 공산당 연합은 두 국가 간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리를 찾는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방의회 선거 운동 때부터 친중 입장을 밝혀 온 네팔 공산당 연합은 네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인도의 입장을 이용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 네팔과 인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밀접했지만 대등하지 않았음. 2015년 말 국경 봉쇄는 인도가 같은 해 9월 제정된 헌법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인도계인 마데시족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것을 압박하고 이에 네팔이 강경하게 맞서며 발생하였음.
- 당시 총리였던 Khadga Prasad Oli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실권하였으나 네팔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다시 다져진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으로 승리하며 총리직에 복귀하였음.
- 이에 따라 인도와의 새로운 긴장관계가 예상되었으나, Oli 총리는 집권 후 인도에 대한 적대적인 언급 대신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인도를 선택하였고, 이후 인도 Modi 총리의 답방이 이어졌음. 양국 총리는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약속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다른 한편으로 네팔은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할 전망이다.
- 대표적으로 전(前) 정부가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을 의식해 중단시켰던 총 사업비 25억 달러, 발전용량 1,200MW 규모의 부디-간다키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재개될 것임을 Oli 총리가 2018년 2월 발표하였음.
- 한편, 경제 분야 외에도 인도와 네팔의 문화적 유사성을 감안할 때 인도의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크며, 중국과의 교류는 양국 접경지대가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관계로 향후에도 협력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및 외채구조 양호

- 2018년 3월 말 기준 네팔에 대한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115.8백만 달러(단기 115.1백만 달러, 중장기 0.7백만 달러)이며, 채무재조정이나 연체 경험이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IMF도 2017년 3월 채무상환능력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네팔의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
- 2018년 말 기준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이 89.1%로 기간별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 OECD는 2014년 6월 거시경제지표 개선, 외채상환 태도 등을 반영하여 네팔의 신용등급을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한편, 현재 네팔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 등급은 없음.

- 네팔은 2018년 관광업의 성장과 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6.3%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네팔 정부는 향후 인프라 확충, 농업 생산량 확대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시켜 OECD 중소득 국가 그룹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11월 개최된 연방 의회 선거는 내전, 제헌 의회 파행 등 20여 년 동안 지속된 정치적 혼란기가 마무리되고 네팔이 근대적 왕정국가에서 현대적 민주국가로 변모하였음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다만, 전체 수입액의 65% 이상을 인도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인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인접한 양대 강국인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존재함.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네팔의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과 동일한 D2로 평가하고자 함. 향후 인프라 확충 및 정부의 국정운영 체계 개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성숙 여부가 네팔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